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2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024년 12월 03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

토론회 개최 배경

-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을 뒤흔들 굵직한 사안들이 본격화되는 2025년
- 그 변화의 흐름을 알고 현재의 교육을 제대로 진단하고 지향점을 찾아야 함
-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 필요
- 현장에 기반한 교육 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함

토론회 개요

제2차 토론회: 좌장 박대권(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발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토론1

학교와 학생을 모르는 국가교육위원회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토론2

국가교육위원회를 고쳐 쓸 수 있을까?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토론3

국가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YouTube 생중계



백승아TV

[예정]제3차 토론회: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

유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024년 12월 17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

[완료]제1차 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 방안

이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2024년 11월 19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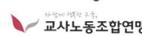
주최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간사)

고민정·박성준·백승아 국회의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 행사 순서 및 자료집 순서

- 개회식 국민의례 및 귀빈소개
- 인사말씀
- 기념촬영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 **좌 장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학 교수
- **발 제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단장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14
- **토 론 1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학교와 학생을 모르는 국가교육위원회 26
- **토 론 2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를 고쳐 쓸 수 있을까? 42
- **토 론 3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국가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56
- **종합토론**

■ 축사



귀한 자리 내어 행사에 함께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담당해 주신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온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교육계 모두의 숙원과제였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긴 논의와 고민 끝에, 2022년이 되어 마침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고, 중장기 교육정책 결정을 위한 새로운 합의체로서 초정파적 기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줄 것이란 우리의 기대를 가득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국가교육위원회는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의견 수렴과 소통 그 무엇도 실현하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교육부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 청사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국회가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안을 더욱 정교하게 개정하는 등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그 방향성과 방안 마련에 대해 더욱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교육 혁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의 행사가 새로운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교육 발전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인사말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2년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큼니다. 중차대한 계획을 논의함에도 사회적 공론화는커녕 비밀주의, 밀실 논의만 거듭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과 같이 국가를 흔드는 의제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10년 청사진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크게 드러났습니다.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장기교육발전전문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짬짜미’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 짬짜미로 얼룩진 전문위원회는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여전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발표를 기존 시한인 내년 3월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으므로 지나간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쟁점을 찾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3월까지 마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향후 10년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지어선 안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기대를 되찾는 첫걸음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입니다. 10년의 청사진을 졸속으로 서둘러선 안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계획이 성안되길 바랍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미래를 위한 많은 제언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를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간사님과 고민정, 백승아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향후 백년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뜻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곧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이나 정부의 교육 정책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보내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그에 걸맞은 교육 정책,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미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기, 다시 세계선도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국가교육위원회가 걸어온 길은 당초 목표로 했던 경로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향도 속도도 역할도 모두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범한 이래, 국가교육위원회는 항상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교육 철학이 부재한 비전문가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시작으로 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과 독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 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기능, 전문성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염원으로 제도화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대로 좌초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관심을 불러온 이번 2024년 국정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을 견제하고 정부의 국가 교육 정책 결정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심을 대변하며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와 국회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국가교육위원회 현주소를 꼼꼼히 진단하고, 법령과 구조의 한계를 허물 수 있는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 교육 정책에 관한 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고민정·문정복·박성준 의원님, 5개 교원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초정파적·사회적 합의로 국민 신뢰를 얻은 중장기 교육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운영 과정은 그 취지와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큰 국민적 실망을 안겼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중간보고서에는 지역인재 전형 폐지, 대학 등록금 완전자율화, 에듀테크 산업 육성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역행하고, 교육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야당 측 위원들의 의견은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특정 입장을 밀어붙이는 형식적 논의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역시 문제였습니다. 현장교사와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턱없이 부족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국민참여위원회는 이름뿐인 기구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할 연구용역 모두 수의계약, 제한경쟁으로 진행돼 원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맞춤형 연구로 진행되지는 않았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는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국가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교육정책의 참신하고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국회 역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가교육위원회 2년을 되돌아보고, 문제를 되짚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024년 12월 03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

발제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이광호(전 국가교육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단장)

이 글은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5』 중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류방란)」을 보완하는 의미로 작성되었습니다. 류방란 전 한국교육개발원장님의 원고에서 미처 다루지 않았거나 필자의 의견과 약간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1. 다시 생각하는 국가교육위원회

□ 20년, 국가교육위원회 탄생에 걸린 시간

○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교육의 일관성과 미래 지향성을 위한 초정파적 기구인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함. 이후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음.

- 2002년 :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이회창)
- 2007년 :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정동영)
- 2012년 : 국가미래교육위원회(박근혜). 국가교육위원회(문재인)
- 2017년 : 국가교육위원회(홍준표·문재인·안철수), 미래교육위원회(유승민), 교육미래위원회(심상정)

명칭과 위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 결정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이 합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정권교체로 인한 교육정책의 변동과 혼란을 뼈아프게 경험한 교육계에서도 지속해서 요구한,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음.

○ 19대 국회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은 이후 꾸준히 발의됨.

- 19대(2012~2016년) : 이용섭 의원
- 20대(2016~2020년) : 안민석, 박경미, 유성엽, 조승래, 전희경 의원
- 21대(2020~2024년) : 안민석, 정청래, 유기홍, 강민정, 정경희 의원

반복적인 발의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예컨대 성병창(2017)은 선거 당시 열세인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행정의 독립성

이 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집권한 후보들은 기존 행정부(교육부)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을 선호한다고 그 이유를 제시함¹⁾. 2012년 대선에서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시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교육부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함. 집권 초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함. 또한 초중등 교육 권한의 교육청·학교 이양과 교육부의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 개편을 제시함. 이는 기존의 일부 법안에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교육부 해체’와 구별됨.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교육회의, 교육감협의회, 대교협, 전문대협, 교총, 전교조 등과 소통하면서 심의·의결을 위해 노력함.²⁾ 하지만 관례적으로 교육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배분되는 조건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지 못함.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원 구성 관련한 지루한 논란 끝에 교육위원장을 여당이 맡게 되었고, 유기홍 교육위원장 중심으로 새롭게 법안이 논의됨. 결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야당(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교육위원회를 통과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행 시기를 6개월이 아닌 12개월로 변경함. 새롭게 설립되는 기구인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출범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야당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가 반영됨.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21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교위 법안)’이 의결됨.

- 국가교육회의는 법률안 제정에 따라, 기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설치지원전문위)’를 확대·개편하여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4개 분과로 나누어 총 27회의 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논의함.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주최로 4개 권역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설치지원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행령이 마련되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들

- 지난 20여 년 대통령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지연된 이유는 앞서 제시한 성병창의 지적 외에 한국의 현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첫째, 한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성공한 핀란드 등과 전혀 다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

1) 성병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가능성」, 교육비평, 2017.5.

2) 국가교육회의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2019.2.28.

3) 이광호, 「핀란드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가교육회의 자료집 서문, 2021

Arend Lijphart는 민주주의의 패턴을 다수제(Westminster)와 합의제(Consensus)로 구분했습니다. 전자가 상대적 다수의 선택을 전체 사회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쟁 정치의 효율성’을 지향한다면, 후자는 다수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합의의 정치’를 지향합니다.

핀란드는 전형적인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내각을 구성합니다. 대략 3~6개의 정당으로 구성되는 정부에서 주로 제2당의 의원이 교육(문화)부 장관을 맡아 2년 정도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주로 제1당, 혹은 2당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사무총장을 맡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민주당 출신의 에르키 아호(Erkki Aho)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이끌던 시기에 사회민주당은 1972년부터 선거부 제1당이 되었고, 1991년 선거에서는 중앙당에 그 지위를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흔히 사회적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 불리는 노사정 합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첫 단추라고 평가받는 종합학교 개혁(문법학교와 공민학교로 계층에 따라 나뉘었던 교육 제도를 9년 과정의 종합학교로 통합하는 개혁)은 역사적인 1968년의 노사정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핀란드의 지속적인 교육개혁,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는 굳건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전형적인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 직접 투표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상대적 다수를 득표한 후보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양당 체제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이분법적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되었지만, 한국에서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정착은 요원한 상태입니다.³⁾

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며,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음.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음.

설령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도 한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결정”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자칫 대통령과 정부(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충돌하거나 ‘옥상옥’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견해였음. 결국 교육정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라는 것임.

-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근거로 제시되었던 ‘정치적 영향 배제’, ‘관료주의 극복’, ‘전문성 강조’ 등이 자칫 ‘전문가 중심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는 우려도 존재함.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논의과정에서 “교육전문가 중심의 교육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

한국 사회에서 ‘교육전문가’는 대부분 교원양성기관(교대, 사범대 등)의 교수이거나 현장 교사(출신)임. 즉, ‘전문가’이면서 ‘이해 당사자’이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예컨대 교원양성체제 개편 관련한 논의가 수십 년째 쳇바퀴 돌 듯 하는 건 ‘전문가’들의 참여한 이해관계(교대, 사대,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등) 충돌 때문임.

게다가 교육정책은 고용·노동·산업·재정 등 사회 전 영역과 깊게 연관됨. 교육계의 요구만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음. 이상의 이유로 “교육전문가 중심의 교육정책 결정” 논리는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셋째, 대통령 주도의 강력한 교육개혁 추진을 소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공약이 ‘방어적이고 수세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음.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미래사회교육회의’라는 명칭으로 제시된 이 견해는 첫째 입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임. 당장의 교육 현안들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이 점이 첫째 견해와 유사함), 중장기적인 교육개혁과 사회대개혁(혹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주체를 형성·조직하자는 방안임.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도되었던 ‘새교육공동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고, 혁신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통해 형성된 풀뿌리 교육주체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설정함. 또한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공공입학사정관’을 도입·운영하여 교육의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고 조직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입장이었음. 이 견해는 최종 공약에서는 국가교육회의로 수렴됨.

- 이상의 우려, 혹은 문제의식들은 법제화 과정에서 일부 반영됨.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10년 단위 발전계획 수립’(국교위법 제11조)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제12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제 13조) 등으로 규정하여 교육부 업무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함.

또한 국교위 법안 제3조 3항의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삽입된 것은 교육학자, 혹은 교육전문가들이 과도하게 많이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었음. 이 규정은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과정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음.

국교위 법안 제16조에 국민참여위원회를 넣은 것도 같은 맥락임. 국민참여위원회는 20대에 발의된 법안에는 없고, 21대 법안에 추가되었음. 그 과정에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운영한 국민참여단의 경험이 반영됨.

- 이밖에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면서 보다 폭넓은 국민참여와 정보 공유, 즉각적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포털 사이트 구축을 시도함.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함. 온라인 사이트 구축 논의에는 핀란드 2014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활용된 ‘학습미래 2030(Future of learning 2030)’, 프랑스의 ‘교육대토론회’(100만명 참여) 웹사이트, 독일의 ‘노동 4.0(Arbeiten 4.0)’ 사회적 합의과정 등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이 참조되었음.



2. 지난 2년,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 국가교육위원회 2년 운영에 대한 평가

-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난 2년 운영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냉혹함.
- 특히 지난 9월의 ‘중장기 국가교육계획 토론회’가 원론적 방향 제시에 그치고⁴⁾ “옛날 팝송 같다”는 평가를 받음⁵⁾. 심지어 중장기교육발전전문위원회 논의과정 사전협의 등이 폭로⁶⁾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따른 사회적 합의는커녕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함.
 이에 국교위 내부에서도 “국교위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등장함. 정대화 상임위원 등 국교위 위원 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패의 원인으로 △정파적 구성 △사회적 합의 실종 △의견 수렴 부재 △소통 차단 △교육부 들러리 역할 △강고한 비밀주의 △위원장의 독단주의 등 일곱 가지를 꼽고, △리더십 혁신 △전문위 재구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⁷⁾

□ 대통령실과 교육부 하청업체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

- 법률로 예정된 출범 기한(2022.7.1.)을 넘겨 지각 출범(2022.9.27)한 국가교육위원회

4) 국교위, 민감 사안 모두 뺀 명탕 토론회, 동아일보, 2024.9.26
 5) 국교위 공개 ‘교육 10년대계’…“옛날 팝송 같다”, 한국일보, 2024.9.26
 6) 회의 전 ‘입장 사전 조율’ 국교위 째짜미 논란, 경향신문, 2024.8.21.
 7) 국교위 출범 2년 만에 내용 표출…진보성향 위원들 “중장기 교육계획 재검토해야”, 한국일보, 2024.10.7.

앞에 던져진 핵심적인 과제는 ‘2025 국가교육과정’ 심의·의결이었음. 2021년부터 교육부·국가교육회의·교육감협의회 등이 협업을 통해 추진해온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었음.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⁸⁾은 그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미래를 예견함. 이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총 35번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그 뒤에 진행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도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됨. 또한 세간의 관심이 높았던 ‘2028 대학입시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였음. 교육부의 요구안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에 그침.

- 류방란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1~24차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대부분은 ‘교육부 보고’임. 심의·의결 안건의 대부분도 내부 운영 관련한 안건임.⁹⁾ 그나마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일부 심의·의결 안건(국가교육과정, 대입개편 등)은 교육부의 요구안이 그대로 관철됨.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지난 2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실패의 원인

○ 법령과 조직의 한계

-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현행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매우 짧았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급조’된 측면이 있음. 그 과정에서 위원장의 인사 청문회 조항에 대한 논의가 빠지고, 위원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교차 추천권¹⁰⁾ 등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함. 또한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학급당 20명’ 등의 쟁점이 법안에 포함됨.¹¹⁾ 즉,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무관한 항목이 추가됨.
-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의존한 측면이 있음. 예컨대 시행령 제 13조 2항의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는 당시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사례를 참조한 것임(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주제에 대해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설계됨).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청원 문화가 사라지면서, 결국 사문화된 조항이 됨.
- 이 밖에도 법안과 시행령에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분 정교한 규정이 부족했음. 예컨대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전체회의로 연결되는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해 정교하게 서술하지 못함. 또한 실제 숙의민주주의, 혹은 공론화 실행 관련한 조항도 구체화하지 못함. 국정과제이자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설립 자체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

8)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빠진 새 교육과정 사실상 확정, 연합뉴스, 2022.12.14.

9) 류방란,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안」,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5』, 에듀니티, p.461

10) 이는 박남기 교수 등이 일관되게 주장한 논리임.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만큼, 각 당에서 추천한 2배수의 후보 중에서 상대 정당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정파적 편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임.

11) 국교위법 제10조 1항 1호, “제 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취지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조직(3개 과 31명 정원)으로 편제¹²⁾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함.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됨.

○ 법령과 제도의 한계는 결국 ‘사람’의 문제로 구체화 됨.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정치적 편향이 여러 차례 비판된 바 있는데, 이는 현행 법령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더 큰 문제는 전문위원회 구성임. 전문위원회 구성에서 ‘진정한’ 교육전문가(교육 현장 출신이거나 교육학 전공자, 아니면 교육 현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음. 예컨대 전문위원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¹³⁾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장순홍	남	▶ 現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 前 한동대학교 총장
2		김영화	여	▶ 現 경북대 명예교수 ▶ 前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3	위원	강경희	여	▶ 現 조선일보 논설위원 ▶ 前 제26대 여기자협회장
4		김거성	남	▶ 現 상지대 객원교수 ▶ 現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위원
5		김경원	남	▶ 現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前 CJ그룹 전략기획총괄 부사장
6		김경희	남	▶ 現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現 한림재단 이사장
7		김병주	남	▶ 現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現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8		김 용	남	▶ 現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現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9		김원중	남	▶ 現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前 대통령직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위원
10		김태일	남	▶ 前 장안대 총장 ▶ 前 KBS 이사회 이사
11		김훈호	남	▶ 現 공주대 교수 ▶ 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청담고등학교 교사
12		남성욱	남	▶ 現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13		마동훈	남	▶ 現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前 고려대학교 미래전략실장
14		박 진	남	▶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前 제1대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15		반상진	남	▶ 現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前 한국교육개발원장
16		이명선	여	▶ 現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명예교수 ▶ 前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교육위원회, 3개 과 정원 31명으로 출범 예정’, 2022.9.2.

13) 이 명단은 전문위원회 출범 당시(2023.5.8.)의 것으로, 현재는 일부 위원의 사퇴와 총원이 이루어진 상황임.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총 사퇴와 전면적 재구성을 의결했음.

17	이상호	남	▶現 경기 다산한강초등학교 교장 ▶現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18	이혁규	남	▶現 청주교대 총장 ▶前 한국사회과교육학회장
19	전택수	남	▶現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0	현혜정	여	▶現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21	홍성학	남	▶現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現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명예교수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문위원을 찾기 어렵고(현직 교장 1명), 교육학 관련 학회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역시 5~6명에 불과함.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위원회가 1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 방향을 토론했다는 건 ‘어불성설’임.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원노동조합 1인의 미참여는 뼈아프게 성찰할 부분임.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두 개의 노조 사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건 진지하게 돌아볼 대목임.
- 지난 2년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설립 취지에 분명하게 표현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 어떤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임.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국민참여위원회가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슨 의제로 논의했는지 드러나지 않음.

3. 국가교육위원회 재탄생의 조건

없앨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

- 설립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년을 경과하면서, 교육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쟁(政爭)과 갈등을 교육계에서 재현하는 통로가 됨. 아마 지난 국정감사 TV 중계를 시청한 국민들은 대부분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답변을 내릴 것임.
- 그렇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함.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접근과 인식이 요구됨. 기존에 제시되었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일관성’ 외에,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음.
-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통령 주도의

‘단호하고 전격적인 개혁’¹⁴⁾이 불가능해진 것을 꼽을 수 있음.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의 표출,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욕구 등은 민주화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또한 한국은 전형적인 통상국가(通商國家)이면서 남북 분단의 갈등을 숙명처럼 안고 있음.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서 교육은 외교·국방·통상·산업정책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음. 설사 대통령과 정부가 희망하는 교육개혁 방향이 있더라도, 그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뛰어넘기 어려움.

결국,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 주요 정책 결정과정의 속의민주주의, 혹은 공론화와 같은 절차가 요구되는 이유임. 이런 관점에서 지난 2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고쳐 쓰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역할 강화

○ 교육계의 조직된 힘과 사회적 여론 형성이 어려운 조건에서, 그나마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질의와 국정감사 때문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운영 개선을 요구해야 함. 특히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발전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해야 함.

○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국가교육위원회 개편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요구됨. 우선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위원장 인사 청문회와 위원의 교차 추천 방식 도입 ☞ 국교위법 제3조 개정
- 전문위원회 구성 관련한 규정(예컨대 유치중등교육전문위원회 등 교육급별 전문위원회 필수 구성 등) ☞ 국교위법 제17조 개정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한 항목 조정(교육부 업무와 충돌 방지, 중장기 교육과제에 대한 추가 제시 등) ☞ 국교위법 제10조 1항
- 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의 사회적 합의 과정 명문화(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속의민주주의, 공론화 →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전체회의를 통한 심의·의결) ☞ 국교위법 제11조 및 16, 17조 개정

이 밖에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더 존재할 수 있음.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소망함.

○ ‘사람’의 교체, 혹은 인적 구성의 개편 역시 중요한 과제임. 하지만 현재 국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필요는 있음. 또한 전문위

14)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의 ‘고교 평준화’, 전두환이 주도한 ‘사교육 금지’와 같은 정책

원회 구성에 있어서 진정한 전문성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현장 교원 출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음.

□ 바람직한 국가교육위원회의 모습을 상상함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교육을 통한 자녀의 성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은 학부모가 많음. 즉, 교육정책이 갈수록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 개발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임.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 의견 수렴, 온라인 공론장의 확대 등을 통해 교육문제를 ‘각자도생’의 영역에서 ‘국가적 의제’로 전환시켜야 함.
- 온라인을 통해 확인된 주요 쟁점은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거기에는 잘 설계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임.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의견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되고 재해석되어 명료한 안건으로 정리되어야 함. 그렇게 정리된 안건이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정책으로 확정되어야 함.
- 합의제가 아닌 다수제 정치구조, 뿌리 깊은 양당 체제의 이념 대립과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모델이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서 교육개혁 뿐 아니라 사회대개혁(대전환)을 실현하는 것임.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제 문화와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발전했다면, 우리는 그 정반대의 경로를 상상할 수 있음. 교육정책 결정의 사회적 합의 경험이 정치·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상해야 함.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024년 12월 03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

토론 ①

천 경 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학교와 학생을 모르는 국가교육위원회

-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1.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라진 교원단체

- 교육부 예산안 중 영유아 초중등교육 예산은 아래의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에서 보듯이 약 78%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①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및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②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고시 등에 관한 사항, ③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견 수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뉜다.

<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억원, %)

구 분	'24년	'25년	전년대비 증감	
	본예산 (A)	예산안 (B)	(B-A)	%
▣ 총지출	957,888	1,048,767	90,879	9.5
【교육분야】	895,665	981,906	86,240	9.6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37,290*	813,807	76,517	10.4
▪ 고등교육 ^{부분}	144,772	155,574	10,802	7.5
▪ 평생·직업교육 ^{부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2,162	11,023	△1,139	△9.4
▪ 교육일반 ^{부분}	1,440	1,501	61	4.2
【사회복지분야】	62,223	65,661	3,438	5.5
▪ 기초생활보장 ^{부분}	1,604	1,652	48	2.9
▪ 공적연금 ^{부분}	60,619	64,010	3,390	5.6
【보건분야】	-	1,201	1,201	순증

※ ('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 → ('25)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21명의 국가교육위원 중 고등교육 종사자는 10명이고,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제외한 7명은 여야에서 추천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각 2명과 국회의장 추천의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까지 19명에 더하여 교원단체 몫은 단 2명에 불과하다.
- 교육부 예산 중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78%에 달하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1명에 달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2명의 교원단체 목소리는 꾸준히 전달되었을까?

- 22년 7월 7일 교육부는 교원단체 14곳에 모두 공문을 보내 교육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164800530?input=1195m>).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원관련 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은 단체들이 합의해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1명씩을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의 교직단체는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로 분리되어 있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이 27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p>제15조 (교원단체)</p> <p>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p> <p>*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p> <p>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p> <p>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 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만 있다.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의 제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비슷한 교원들의 참여하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가 등장하였다. 교원노조 간 선의의 경쟁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다시 발생한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두 자리 중 하나는 교원단체의 몫으로, 다른 하나는 교원노조의 몫으로 정해졌고 새로운 교원단체의 진입이 불가한 교원단체의 몫은 한국교총이, 다른 하나는 '단체들이 합의해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1명씩을 추천'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교원단체의 참여가 계속 미뤄진 것이다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4810537>).

- 결국 22년 9월 27일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원단체 몫의 두 자리가 공식인 채로 시작되었고, 22년 11월 2일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가 회동 후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먼저 국교위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
- 그로부터 무려 6개월 가량이 지난 23년 4월 17일.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교원노조 몫의 국가교육위원 임기를 절반씩 맡기로 합의를 하였다. 두 단체는 국교위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추천된 국교위원이 위원장을, 다른 단체 측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경우 교섭위원 수를 양측 5:5로 구성하고, 대표교섭위원은 각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하기로 했다.
- 다시 그 후로 3개월 가량이 지난 23년 7월 14일. 국가교육위원회는 두 단체의 합의를 거부하였다. 교원단체들이 합의한 추천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71726/N>). 교원단체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공식인 채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된 것이다.
- 다시 약 6개월 후 이번에는 한국교총 회장이었던 정성국 회장이 '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 힘 지역구 의원 후보로 출마를 위해 국가교육위원의 자리를 사퇴하였다. 한 명 남았던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 사라진 것이다. 이후 한국교총의 내규에 따라 6개월 후에 실시된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마저 개인적 사유로 사퇴하게 되고, 다시 6개월 후인 12월에 한국교총 회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 무려 1년을 공식으로 둔 것이다. 바꿔 말해서 2024년에는 단 한 명의 교원단체 소속 국가교육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조금도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2. 교사를 찾지 않는 국교위, 학생을 다루지 않는 국교위

-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부터 많은 이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여야 모두 진보와 보수 색채가 뚜렷한 인물로 위원 구성을 마쳤다는 평가(<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56683/N>)를 받았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국가교육위원이 정해진 것이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부속기구화 우려(<https://biz.heraldcorp.com/article/2951946>)다.
- 아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기사들이다.

①정치적 편향성 관련 기사

국가교육위 27일 지각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22.9.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2072700530?input=1195m>
윤 대통령, 국가교육위원장에 '친일미화' 역사학자 이배용 임명 22.9.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9650.html>

국가교육위 27일 지각 출범… '정파 갈등' 우려도 22.9.22.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9/22/M35J2HIYWVGKTAFU53VRMLQP5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가교육위원회 명단 공개…'정치적 중립성' 보이지 않는다 22.9.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9704.html>

[사설]국가교육위, 정파 초월한 교육 청사진 마련해야 22.9.2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3500078&wlog_tag3=naver

'남침'은 넣고… '자유' 빠진 '민주주의'는 그대로 뒀다 22.10.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30/CI2LTFE3KFAXPA5BCCJVV74FY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22.12.2.

2일 역사과 심의위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 압도적 반대... '기밀누설 금지' 요구 논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548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국가교육위 찾은 김광수 제주교육감 "교육과정에 4·3 명시" 요청 22.12.6.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206_0002113424&cID=10813&pID=10800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등 논란 표현 유지” 22.1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617741&ref=A>

'2022 교육과정 행정예고' 의견 1574건 접수…'성평등' 용어 최다 22.12.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8646632555896&mediaCodeNo=257&OutLnkChk=Y>

'자유민주주의' 명기 끝내 강행…위원회 '들러리' 세운 교육부 22.1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70453.html>

'자유민주주의' 살리고 '성평등' 빼 교육과정, 국가교육위 상정 22.1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3677>

국가교육위원회 '갈등' 다룰 제도적 장치 필요. 22.12.26.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97756/N>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에 광주전남 '부글부글'…"민주주의 퇴색될 것" 23.1.3.

<https://www.moneys.co.kr/article/2023010414443424494>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 이제 벗어나야 23.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336>

'소극성·정파성'에 묶인 국가교육위 1년…갈 길은 구만리 23.9.24.

교육과정 심의부터 '빠그덕'…'초미니' 위원회에 존재감 미미

온전한 위원회 구성도 아직…'2028 대입개편' 등 과제는 산적

<https://www.newsl.kr/society/education/5181033>

국가교육위원 김주성 “좌파는 사람 죽여”…정치중립 훼손 논란 23.9.24.

전 한국교원대 총장 뉴라이트 역사단체 이력

국교위법 1조 '정치적 중립성' 동떨어진 발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09795.html>

[단독]국힘,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영입…최초 초등교사 출신 회장 24.1.7.

<https://www.newsl.kr/politics/assembly/5282626>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의미래' 공천 신청 24.3.12.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4>

'두 돌' 국교위…"갈등 공화국 축소판" 이런 비판 나오는 이유 24.9.29.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정하는 주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긴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 부처 등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도 명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교위는 출범 이후부터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1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2022 개정교육과정,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 등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교육부가 안을 만들면 원안을 대부분 추진하는 정도의 역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는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7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중대한 과제였음에도 심의본을 상정한 지 단 9일 만에 표결로 의결하기도. 구성원이 여야 추천으로 결정되면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 게 원인이라는 지적.
- 4월 총선 때는 국교위 위원 4명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정당 소속으로 출마 혹은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국교위 비상임위원이었던 박소영(51)씨와 김태일(30)씨는 지난 5일과 9일 각각 국교위에 사임계를 내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했다. 또 다른 국교위원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 회장은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흥원화 경북대 총장도 국교위 위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811>

진보 성향 국교위원 "국교위 불능 상태"...보수 위원들 반박 24.10.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5361&ref=A>

29학년도 대입 계획 발표 앞두고 '둘로 쪼개진' 국가교육위원회 24.10.7.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071128067855

- 국가교육위원회 어디에서도 영유아 및 초중등 학생의 신체, 인지, 정서 발달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의제가 아니라 이념만 다루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교육의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선명성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었고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교육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경력의 일환으로 쓰일 뿐이었다. 따라서 교원단체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부속기구화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교육부의 부속기구화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교위가 연관된 기사를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해 보았다.

[국가교육위 출범]③교육부와 업무영역 불분명...갈등 불가피 22.7.17

대통령·정부·여당 몫 위원만 과반수 넘을 수 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극단 갈등" 우려

"위원들, 안건 결정하지 말고 속의 과정에 맡겨야"

https://www.news1.com/view/?id=NISX20220716_0001945459&cID=10201&pID=10200

국가교육위 사무처 3課 체제 입법예고 22.9.2.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사무처가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

지원과 등 '3과 체제'에 정원 3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생각보다 작은 조직 규모에 우려의 시선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0201030903022001>

“교육부는 540명인데, 국교위는 31명? 교육부 부속기구화 우려” 22.9.7.

교사노조 “국교위 직제 3개국으로 높이고 인력 증원해야”

교육감協 “핀란드 국교위는 480여명, 직제 원점 재검토”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951946>

국가교육위 예산, 다른 위원회 5분의 1도 안 돼...유명무실 우려 22.9.13.

국교위 내년 예산안 88억9,100만 원

인권위의 21%, 개인정보위의 15% 수준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확대" 지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215480001874?did=NA>

국가교육위 27일 출범...“교육부 방패기관 전락할 수도” 22.9.22.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924_0002025075&cID=10201&pID=10200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부속기구이자 방패기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여론의 우려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

②-1 교육부 부속 기구화의 사례

'자유민주' 표현 새 교육과정에 넣는다...'성평등'은 삭제 22.11.9.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까진 '민주주의'로 표기됐으나, 교육부가 행정예고안에 '자유'를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자유 민주주의' 표현에 반대했으나, 교육부가 자체적인 절차를 거쳐 '자유'를 추가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 속 성(性)소수자 관련 표현도 연구진이 아닌 교육부가 원하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당초 시안에 있던 '성소수자'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 학생 6명 포함 156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교육도 강화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108_0002078615&cID=10201&pID=10200

국교위, 새 교육과정 수정 권한 있나... 심의 코앞인데 아직 '논의 중' 22.12.2

교육부로부터 새 교육과정 최종안을 넘겨받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아직도 수정 권한 등 심의 방식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과 '성소수자' 등 성(性) 관련 용어 삭제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기구의 의결을 거친다는 명분 속에 자칫 정부의 뜻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교육부는 "국교위에서 결정된 새 교육과정을 고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국교위는 정부가 제출한 최종안을 어떻게 심의할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규정한 법령은 없다"고 설명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가 최종안에 대해 수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심의·의결 방식은 국교위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교위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심의·의결 방식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교위와 교육부가 계속 협의하면서 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조정해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114240001684?did=NA>

[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22.12.2.

2일 역사과 심의위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 압도적 반대... '기밀누설 금지' 요구 논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548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고교 한국사 심의안 ‘밀실’ 수정…투명하게 밝히라” 연구진 성명 22.12.9.

역사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이 유지됐다. 또 고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6개에서 9개로 늘렸는데, 행정예고 기간 역사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반영해 고대·고려·조선 등 총 3개 성취기준을 추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요구한 역사 관련 학회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9일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 일동’은 성명을 내고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학습할 교육과정은 장시간의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기초해 개정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일부 역사 관련 학회’의 의견임을 내세워 시안을 수정했다. 교육부와 연구진이 협력해 개발해온 과정을 교육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70968.html>

국가교육위, 출발부터 '졸속심의'·'거수기' 논란 22.12.15.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이 큰 틀에서 유지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국교위의 내실있는 새 교육과정 심의·의결을 위해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기본 원칙 적용 △복수 표기 허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가운데 '논쟁 재현 원칙'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 중에도 반드시 논쟁적으로 재현돼야 한다'

<https://www.newsl.kr/society/education/4895599>

개정 교육과정 의결 '갈등'... "국교위원장이 일방적 처리" 22.12.15.

국교위는 전날 심의본 의결 과정에서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제시 ▲제주 4·3사건 역사 교과서 반영 ▲도덕함, 노작 등 불명확 문구 수정 등을 제외한 심의본을 그대로 의결했다.

행정예고 과정에서 추가돼 교육계 갈등이 첨예했던 '자유 민주주의' 추가, '성평등, 성소수자, 근로자' 삭제 등은 그대로 유지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215_0002124497&cID=10201&pID=10200

'새 교육과정 의결' 갈등 확산... "졸속 심의" vs "왜곡 선전" 22.12.16.

보수 위원 10인, 16일 '우리의 입장문' 발표

"일부 주장대로 졸속 강행처리 아니었다"

진보 위원 5인, 전날 "토론없는 졸속심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216_0002126189&cID=10201&pID=10200

'백년대계' 만든다던 국가교육위...교육정책 '운전대'는 아직도 교육부에 23.3.23.

1) 먼저 조직 규모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해 공무원 정원 31명 수준으로 최소화됐다. 비슷한 지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163명), 국가인권위원회(205명) 규모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 위원 구성을 할 때 협의나 타협보다는 정파성을 띤 인물이 들어오기 쉽게 되어있는 것도 문제다.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재적인원 20명 중 대통령 지명 5명, 여당 추천 3명,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까지 총 9명이 정부여당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합치면 많게는 13명이 정부여당에 가까운 성향이다. 정부여당의 의사를 반영해 단독으로 회의를 열 수 있고 의결도 가능해 국교위가 사실상 '교육부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3) 교육부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교육의 디지털 전환, 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 등 굵직한 교육정책을 쏟아내는 동안 국교위는 어떤 역할도 맡지 못했다. 전체회의 때마다 주요 정책에 대해 교육부에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다. 국교위는 지난 17일 중요 교육의제를

검토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위와 지방대학발전특위, 전인교육특위, 직업·평생교육특위, 미래과학인재양성특위 등 총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역시 임기가 1년인 자문위원회 수준이라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향 마련도 사실상 교육부가 주도.

교육부와외의 기능 분배가 불분명해서 앞으로 두 기관의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교육발전 계획에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 및 교원정책, 대입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이 담기는데, 교육부의 분야별 기본·종합계획과 상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덕남·유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개별법률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교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3231648001>

②-1-1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

초 1·2 '체육' 별도 교과로…신체활동 늘리고, 마음건강 살핀다 23.10.30.

코로나19로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가 심화하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교육부 관계자는 "몇 년도에 통합하겠다는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과정 개정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체육 분리를 제안한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0080700530?input=1195m>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인성 함양에 체육 중요… 별도 교과 긍정 검토” 23.11.08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7520796?OutUrl=naver>

국가교육과정을 시행도 안 해보고 '변경'? 교육감들도 "반대" 24.4.2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420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교육과정 변경? 교사 여론 "반대 89%" "불필요 90%" 24.4.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488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35년 만에 초1·2 '체육' 분리된다…국교위 “개정 추진” 24.4.26.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여 체육 교과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1206638860056&mediaCodeNo=257&OutLnkChk=Y>

'초1·2 체육 분리' 국교위 진통... 위원 5명 "졸속 결정" 반발

국교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등 1·2학년이 음악과 미술, 신체활동을 묶어 배우는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저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현행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체육 교과 분리 추진을 공식화

국교위 결정이 표결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위원 17명 중 과반인 9명이 찬성했지만 반대 2명, 기권 2명에 4명은 중간에 자리를 뜨고 표결에 불참하며 합의에 진통.

국교위가 40년 넘게 유지된 통합교과 체제를 바꾸면서 종전 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전 판단이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

"교육과정 문제를 다룰 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돼 있고 전문위는 신체활동 분리를 부동의했으나, 국교위 전체회의에선 이에 대해 단 한 번의 토론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국교위법에서 전문위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08290000331?did=NA>

교사·교육감도 반대한 교육과정 벼락 변경... "국가적 낭비" 24.4.2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584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교육과정 변경에 전문위도 "연구 필요"... 사실상 반대 24.5.9.

[단독] 법정기구인 국가교육위 전문위 보고서 내용은?... 국교위 강행, 입법취지 위배 논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89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②-1-2 외교 자사고 존치 교육과정

국가교육위, '자사고·외고' 관련 교육과정 개정 여부 논의 24.02.16.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치가 결정된 국제외국어고, 자사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국교위는 16일 오후 제2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 여부(자사고 등 관련)'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지난달 16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 근거를 되살렸다.

국교위는 자사고와 국제고·외고 부활에 따른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수립·변경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및 의결할 예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1614015651678>

국가교육위, '자사고 존치' 반영한 교육과정 변경안 심의 24.8.9.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9085800530?input=1195m>

외고·자사고 존치 교육과정 확정...중학교 스포츠클럽 34시간 확대 24.8.9.

국가교육위, 국가교육과정 변경(안) 심의·의결

사교육경감특별위 구성...위원 위촉안 보고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506399>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요구한 교육과정 문구 수정부터,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 자사고 및 국제고, 외고 부활 개정 요청까지 전부 의결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조직의 약 5% 정도 크기의 작은 조직이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다. 예산도 여타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 21명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은 3명에 불과하고 18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전국에서 모인다. 국가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여 회의에 참여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현실인 것이다. 그마저도 교육부 예산의 78%가량을 집행하는 영유아 및 유치중등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되었다.

3. 국가교육위원회에 없는 세 가지

(1) 교원단체와 의견수렴

- 다음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호 전 서강대 교수가 한 이야기다.

“교육공무원은 교육충” “학교문 닫아라” .. 국교위원 발언 논란
 “학교보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잘한다.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온라인이 훨씬 공부를 잘 가르친다”며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이 제정신이면 사교육을 공교육 교육과정에 받아들여야 한다. 사교육으로 받은 학점을 공교육 교육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사교육을 두둔했다.
 교원과 교직원을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여름 방학 겨울방학에 해외여행 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대한민국 교사들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수업일수는 가장 작다”면서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자던 말던 교사들은 관심이 없고 교육은 형편없어진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교사와 교직원, 교육공무원들을 “교육을 뜯어먹고 사는 교육충”이라며 벌레에 비유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638>

○ 그래서일까?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은 1명이 22년 11월 3일부터 24년 1월 5일까지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것이 전부였고, 교원노조 몫의 국가교육위원은 단 하루도 참여하지 못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장 교원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자.

① 국민여론의견 수렴

‘2022교육과정’ 시안에 **국민의견 7860건**…2024년 초1~2, 2025년 중·고교에 적용 22.9.1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960965>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교육정책, 현장과 국민의견 경청할 것”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710072431853>

[포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여론 수렴해 교육정책 반영 할 것” 22.10.2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장기적인 교육발전 계획 수립과 교육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겠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0/24/2022102400149.html>

“교육정책에 국민 목소리 들려주세요”…국교위 **국민참여위 모집** 23.3.15.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081600530?input=1195m>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절차 운영방안 심의** 23.3.17.

제11차 회의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방안'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방안'을 심의, 지정된 연구센터는 앞으로 2년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점검, 모니터링단 운영,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등을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7093800530?input=1195m>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심의…**국민 의견수렴 절차 논의** 23.4.14.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059200530?input=1195m>

국가교육위, **500명 규모 '국민참여위원회'** 발족…의견 수렴·자문 23.6.23.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085975>

국가교육위, '2028대입 개편 시안' **국민 의견수렴 절차 논의**

교육부서 시안 보고받아…**국민참여위 대상 의견 수렴 예정**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193681>

학부모 70% 대입 개편안 '긍정'..과반수는 심화수학 신설 반대 23.10.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513292521639>

국교위, '2028 대입개편' 심의 착수…**국민 의견수렴 방안 논의**도 23.11.03.

https://www.news1.com/view/?id=NISX20231103_0002508211&cID=10201&pID=10200

국가 교육과정 수립에 국민 참여한다…“20만명 이상 동의 필요” 24.1.14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2050300530?input=1195m>

국가교육위, 국민참여위 워크숍 개최…미래교육 방향 논의 24.4.23.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393464>

교육정책, 국민 의견 받는다…90일 내 10만명 동의 시 심의 24.10.11.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플랫폼 홈페이지 개통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1_0002916243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교육과정 수립(30일 동안 20만) 및 교육정책(90일 동안 10만)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허들은 잔뜩 높여 놓았다. 그래서인지 AI 교과서 도입 유보 청원이 5만을 돌파했음에도 국민여론은 가볍게 무시되었다.

①-1 국민여론의견 수렴의 실제

“AI 교과서 우려”한 국교위, 공론화엔 ‘뒷짐’ 24.8.21.

작년 6월 회의서 “평생 영향 미치는 중요한 변화” 언급

1년 넘도록 안건 안 다뤄…‘도입 유보’ 청원은 5만 돌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8212119015>

- 그렇다면 학교 현장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을까?

② 교육계 의견 수렴의 현실

“교육계 요구 목살” 교육과정 확정 뒤에도 논란은 여전 22.12.23.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2231535001>

교육과정 변경? 교사 여론 "반대 89%" "불필요 90%" 24.4.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488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교사·교육감도 반대한 교육과정 벼락 변경... "국가적 낭비" 24.4.2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584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현장 교사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대한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2년 9월 27일 출범한 이후 약 2년 1개월이 지나서야 교원단체를 처음 만났다.

교총 등 교원단체-국교위 간담회 24.11.4. *첫 교원단체 간담회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3032>

- 국교위가 소통하는 대상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주로 각 시도지사 와 고등교육 관계자들이었다.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현장 소통

- 국가교육위원회는 많은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토론회 발표는 대부분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대학위기와 지역대학 활성화를 주로 다루었다.

국교위, 경북서 현장 소통 간담회…지방대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3.2.1.

먼저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지역 대학 총장, 산업계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경북지역 대학 위기와 지역 대학 활성화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학부모·교사를 초청해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경북교육의 과제와 역할을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045200530?input=1195m>

국교위, 전북서 미래교육 현장소통 간담회…지방대 위기 등 논의 23.3.13.

간담회에는 김관영 도지사, 전북지역 대학 총장,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전북지역 대학 위기와 지역대학 활성화 과제를 이 위원장과 논의한다.

특히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 이영준 전북과학대 총장이 직접 발제를 맡아 전북지역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066000530?input=1195m>

국가교육위원회, 부산서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 23.4.26

간담회에는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도 참여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6078300530?input=1195m>

국교위, 충북서 현장소통 간담회…공교육 신뢰 회복 등 논의 23.6.28.

간담회에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충북 지역 국·사립대 총장,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해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지방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8076600530?input=1195m>

④국가교육위원회의 토론회 참여자

- 국가교육위원회의 토론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까?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의 목소리 청취만 있었음을 아래의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 미래교육 주제로 16일 대토론회 개최 23.5.15.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상운 교육부 차관과 대학교수, 국교위원 등이 참석해 미래 교육에 대한 기조 강연과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의 주제 발표, 종합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 디지털 시대가 됐지만 줄 세우기 교육, 평가방식 등 여전히 바뀌지 않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는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교육',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교육 노화에 들어선 한국',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초대 원장은 '경계 없이 도전하는 혁신 인재' 등의 주제 발표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5052300530?input=1195m>

국가교육위원회, 'AI 시대 교육과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 23.7.17.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발제자로 참석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4126700530?input=1195m>

교육개혁 미래와 과제는…국가교육위, 출범 1주년 토론회 23.9.19.

기조강연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맡았다. 염 총장은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과 한국 교육개혁'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조강연 이후에는 **김무환 전 포항공대 총장** 주제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챗GPT-X 인공지능의 미래와 교육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공지능(AI)과 인간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교육혁신 방향을 제안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박진배 전북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가 지정 토론을 진행할 예정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175774>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24.2.27.

국가교육위원회, '대전환의 시대 우리 교육의 길' 대토론회

기조 강연을 맡은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문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일자리의 급속한 변화 등을 겪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지적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이 외에도 이날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는 '미래 산업·기술의 변화와 교육'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인공지능이 가진 강점과 특별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5100>

국가교육위, '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 심층토론회 개최 24.3.25.

기조 발제를 맡은 **손동현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비전, 융합·창의 교육의 길'을 주제로 우리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361719>

국교위,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 내놓는다…"창의·도전·공감·협력" 24.9.26.

이배용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2주년 성과 보고 및 미래 교육 방향과 기본가치'에 대해, **황준성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장**이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안)'을 발표

토론자로는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신현석 한국교육학회 회장**, **이민지 국교위 비상임위원**, **김건 국교위 비상임위원**,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이 참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92509223301061>

중장기 고등·평생교육 과제는…국가교육위 8차 토론회 24.11.25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100세 시대 선진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직업 교육의 통합 교육 체계'를 주제로 고등교육 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질적 제고를 모색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5052900530?input=1195m>

(2)학생의 삶

-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학교폭력은 해가 갈수록 음성화되고, 도박중독이 늘어나고,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줄어들며, 야외에서 보내는 신체활동이 줄어든다는 아동청소년 통계(2022 통계청 자료 참조)가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 다룬 토론회는 위에서 확인 바와 같이 단 한 건도 없었다.

(3) 기록의 부재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에서 절차의 투명성을 지키지 않았다. 내부 논의는 기밀이 되고, 회의록은 간소화 되었으며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22.12.2.

2일 역사과 심의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표기' 압도적 반대... '기밀누설 금지' 요구 논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548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고교 한국사 심의안 ‘밀실’ 수정…투명하게 밝히라” 연구진 성명 22.12.9.

역사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이 유지됐다. 또 고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6개에서 9개로 늘렸는데, 행정예고 기간 **역사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반영해 고대·고려·조선 등 총 3개 성취기준을 추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요구한 **역사 관련 학회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9일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 일동’은 성명을 내고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학습할 교육과정은 장시간의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기초해 개정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일부 역사 관련 학회’의 의견임을 내세워 시안을 수정했다. 교육부와 연구진이 협력해 개발해온 과정을 교육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70968.html>

국교위 소통·운영방식 도마...'**깜깜이 회의록'** 방지법도 발의됐다 23.2.16.

교육과정 심의 과정 '**1장 회의록'** 지적

속기록 비공개, 회의 불참 의원까지 참여

野, 회의록 내용 구체화한 법안 발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616140000935?did=NA>

국가교육위 속기록 놓고 충돌...야 "제출 거부시 고발" 여 "사후 검열" 23.10.26.

더불어민주당은 속기록 제출을 거부하면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국민의 힘은 **사후 검열 의도가 있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엄호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211376>

4. 국가교육위원회에 필요한 네 가지

-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 참여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의 교원단체 참여 보장
- 정치적 편향성이 아닌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구성
- 교원단체의 대표가 아닌 소속 단체의 전문가를 국가교육위원으로 임명
- 국가교육위원회 모든 회의 과정의 투명성 보장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024년 12월 03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

토론 ②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를 고쳐 쓸 수 있을까?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의 본연의 모습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 국가교육위원회를 고쳐 쓸 수 있다면 고쳐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과연 고쳐 쓸 수 있을까? 지난 2년간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고, 정부와 여당은 예산과 인력도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배당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도 내비친 바가 없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널리 공감받았고, 이를 구체화한 법령은 큰 줄기에서는 대체로 적합하였다. 법령에 허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 기존의 법령에 맞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지금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당”에 쏠리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을 개혁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과연 새삼 “파당”에 쏠리지 않는 자세를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령을 일정하게 고쳐서 자의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할 여지를 없앤다고 해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의지가 없다면 완벽한 법령도 휴지몽치가 될 수밖에 없다. 제도 운용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다.
- 물론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법령을 새롭게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의 문제까지는 어찌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때를 대비하여 법령의 문제점을 고쳐두는 것이 정상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온 국민이 매일 접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는 용어를 먼저 쓴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였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는 ‘국민참여단’ 사업을 펼치면서 “국민의 힘으로 교육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당이 출범하였다. 국가교육회의든 국민의힘 당이든 결국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호를 내걸고 당명도 지은 것이 아닐까?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문제는 진정성이다. 구호나 명칭에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일정하게 동의하여 통과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탄생은 ‘국민 참여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라는 지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 여당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조장하고 방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이 아닐 수 없다.

□ 국가교육회의의 사례를 참고하고, 취지를 계승하기 바란다.

- “지난 2년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설립 취지에 분명하게 표현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 어떤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이라는 이광호 전 기획단장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령의 시행 시기를 대통령 선거 이후인 6개월 뒤로 늦추면서까지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일정하게 양보해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만 광범한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지난한 과정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광범한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방식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도 한국 사회와 정치 지형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구안해야 하기에 인내하며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나아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가교육회의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숙의민주주의, 혹은 공론화와 같은 절차가 요구되며,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관점에서 추진한 것이 ‘국민참여단’ 사업과 ‘국민과 함께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결국 국가교육위원회 법령에 반영되었다.
- ‘국민참여단’ 사업과 ‘국민과 함께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기 바랐던 ‘온라인을 통한 주요 쟁점 확인 →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전체회의를 통한 심의·의결’이라는 국민참여에 기반한 정책 결정 과정을 미숙하나마 미리 실천해본 것이었다.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전문가주의, 관료주의, 교육계에 갇힌 폐쇄성, 몰이해 등이 실행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교육회의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더욱더 큰 장애물이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도 위원장 등의 실행 의지 부족과 더불어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배당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의지가 있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기 힘든 상황이다.
- 국가교육회의에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 개발을 추진한 것도 ‘국민 참여에 기반한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참여단’ 사업의 경우에 2020년~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추진되었으나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 의견 수렴, 온라인 공론장의 활용 등을 통해 일정하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 편협한 당파성 때문에 마땅히 계승되어야 할 앞선 시도들이 그대로 묻히는 모습들을 무수히 목도하게 된다. 더 깊은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다. 정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속의민주주의, 혹은 공론화와 같은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이다. 전문가와 관료의 울타리에 갇히고, 중앙 집권과 수도권에 벽에 막힌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내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는 단기간에 확립되기 어렵다. 확고한 의지와 전망하에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과제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앞선 시도들을 검토하고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권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사회적 합의’가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와 절차, 그것을 수행하는 기구의 역할도 정권 차원을 넘어서야 하고, 앞선 시도들이 제대로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1]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사업

국민참여단의 의의와 향후 방향

2021. 1. 20

황호영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한국교육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공감을 얻기 시작한 지 길면 30년, 짧으면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개혁 담론들과 주장과 요구가 쏟아져 나왔고 역대 정부는 교육개혁을 표방하고 일정하게 시도한 바 있다. 특히 1995년에 시행된 5·31 교육개혁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개혁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교육의 병폐와 모순은 여전하다. 왜 객관적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는 높은데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문제는 간단할 수도 있다. 전면적 개혁은 그만큼의 추진 주체와 추진 동력, 그리고 치밀한 추진 계획을 필요로 하고, 개혁이 현장에 뿌리 내려 효과를 보기까지 일정한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만 하면 단기간에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보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현 시기는 한국사회의 전환기이자 교육체제의 전환기이다. 과도기이다. 기존의 교육체제는 각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심각한 모순과 마찰을 겪고 있으나 아직 새로운 교육체제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교육 전반이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 처한 과도기이다. 교육체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주체와 동력, 요구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모아낼 수 있는 총체적 구상·전략과 추진 체계,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전면적 교육 개혁의 시도를 시작하지조차 못한 상황이다. 전면적 교육개혁의 물꼬를 틀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 시기의 관건이다.

I. 국민참여단 추진 배경

현재의 교육체제를 일대 혁신하여 수립할 새로운 교육체제를 일단 미래교육체제라고 부르겠다. 미래교육체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정한 방향은 어렵듯이 잡히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019년 10월 23일 한-OECD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국가교육회의는 그동안

교육관계자와 시민사회와의 광범한 논의에 기초하여 교육체제 혁신의 주요 지점들을 살펴본 바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핵심은 학습자의 삶을 중심에 놓는 교육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산업사회의 한계와 시장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한계로 인해 현재의 교육체제는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에 따른 획일적 교육, 입시경쟁에 매몰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삶을 보듬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새로운 정책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책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결합한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학습자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교육체제에서는 자치분권과 교육 거버넌스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정치 시스템으로는 학습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지방 자치분권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학습자의 삶을 담는 세심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자치가 아닌 지역주민의 자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풀뿌리에서부터 기초자치, 광역자치 단위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시민의 전면적인 참여 없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수립만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내는 새로운 정책 시스템에 필요하다.

현재 국회를 통해 법률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하는 기구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교육자치분권과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단임제 대통령 체제에서 교육개혁은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을 초월하여 지속적, 중장기적 교육혁신을 이끌 기구이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한국교육을 일대 혁신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와 추진 동력, 그리고 치밀한 추진 계획을 필요로 하고, 개혁이 현장에 뿌리 내려 효과를 보기까지 일정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야말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 기구이다.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안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①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②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고시 ③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④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국민참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청년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과 다양한 사회 계층 등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의 실천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혁신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어온 일련의 정책과 실천이 바로 그러하다. 혁신교육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결합한 현장의 교육운동으로 전개되었고, “혁신학교 → 혁신교육지구 →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혁신교육은 한국교육

의 전면적 개혁을 가능케 할 주체와 동력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일정하게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이 협력하고 협의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어냈다. 아직 지역적 차원과 유·초·중등 부문에 한정되어 있고, 주체와 동력의 확장이 미흡하며, 고등·직업·평생학습 부문의 주체와 동력이 미미하여 한국교육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기반을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등은 이런 지역 모델을 어떻게 확장하고 전국화 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고 노력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그동안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담론을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정리해왔으며, 대학입시제도와 교원양성체제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교육의제에 대한 숙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관료와 소수 전문가에 의해 독점되어온 정책 결정의 과정을 넘어 국민의 참여로 교육을 바꾸는 길을 열고자 하는 일관된 시도였다.

국민참여단은 국가교육회의가 이상과 같은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갖고 추진한 것이며 결코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다. 지역에 일정하게 축적되어온 미래교육체제를 지향하는 주체와 동력을 토대로 하고,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정부, 교육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미래교육체제로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시도이며, 향후 지속성을 가지고 계승, 보완, 발전시켜가야 할 사업이다.

II. 국민참여단 추진 과정과 10대 교육의제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에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교육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자치콘퍼런스와 한-OECD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의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토대로 2020년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국민참여 미래교육 10대 의제를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선정하였고, 12월 17일 열린 국가교육회의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선정된 10대 의제를 국가교육회의와 유관 기관이 듣고 답하는 과정을 거쳤다.

1. 국민참여단 운영

□ 추진 배경

-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일관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계층의 의견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구 확대
-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협치로 미래 교육정책 제안 및 지역 교육력을 강

화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기반 마련 필요

- ◆ [국정과제 76-3]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2017.12.27., 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

□ 추진 방안

- 지역별 민·관·학 주체들이 교육협치기구(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등)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참여
- 지역과 주체별* 속의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10대 의제 선정에 위한 활동 진행
 - * 주체(별)단위: 청년·학생, 교원, 학부모 단위
- 국민참여단 모집에서부터 10대 의제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추진단(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 미래교육 10대 의제는 국민참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

□ 운영 로드맵



2. 국민참여단 활동 경과

□ 국민참여단 모집

- 모집방법: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역과 국가적 교육의제에 관심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입
- 모집기간: '20. 9월 ~ 12월 12일
- 모집결과: 6,974명

< 연령대별 분포 >

연령	인원(명)	비율(%)
10대	148	2.1%
20대	679	9.7%
30대	1,410	20.2%
40대	2,759	39.6%
50대	1,588	22.8%
60대 이상	390	5.6%
계	6,974	100.0%

< 참가유형별 분포 >

참가유형	인원(명)	비율(%)
학생	321	4.6%
교원	2100	30.1%
교원 외 교직원	198	2.8%
학부모	2087	29.9%
교육전문가	798	11.4%
시민단체	382	5.5%
일반국민	1088	15.6%
계	6974	100.0%

< 거주지역별 분포 >

거주지역	인원(명)	비율(%)	거주지역	인원(명)	비율(%)
서울	1,466	21.0%	강원	306	4.4%
부산	197	2.8%	충북	228	3.3%
대구	112	1.6%	충남	149	2.1%
인천	190	2.7%	전북	146	2.1%
광주	212	3.0%	전남	185	2.7%
대전	159	2.3%	경북	160	2.3%
울산	47	0.7%	경남	554	7.9%
세종	226	3.2%	제주	17	0.2%
경기	2,620	37.6%	계	6,974	100.0%

□ 지역별 국민참여단 워크숍

- 목적: 광역단위 또는 지역 단위 풀뿌리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통한 주민 교육자치 토대 구축
- 대상: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국민참여단
 - ※ 혁신(행복·미래)교육지구,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청소년 관련 단체, 학생·학부모·청년 등 다양한 교육주체 참여
- 운영기간: '20. 7. 21.(화) ~ 11. 30.(월) ※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지역	날짜	장소	참가인원	주최	주관
경기	7.21.(화)	파주시청	100	파주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충청권	10.27.(화)	세종시교육청 대강당	68	국가교육회의 세종시교육청	충청권 교육청
호남권	11.4.(수)	광주YMCA	55	"	광주YMCA
인천	11.23.(월)	인천시교육청	28	국가교육회의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호남권	11.25.(수)	순천만습지센터 3D영상관	50	국가교육회의	순천시청 순천시교육지원청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경기	11.30.(월)	하남시청소련수련관 (온·오프라인)	120	국가교육회의 하남시혁신교육포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청, 하남시의회

□ 지역·주체별 국민참여단 숙의과정

- 목적: 각 지역의 국민참여단 중심으로 지역과 주체별 교육의제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의제 수렴
- 운영기간: '20. 11. 11. ~ 11. 27.
- 온라인토론폰 운영: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2030 미래교육토론폰방 운영
- 토론회 개최: 대면회의, 영상회의, 실시간중계 등의 방식으로 운영

지역	날짜	장소,방법	참가인원	주최	주관
서울	11.13.(금)	지역아동센터 원탁토론	23	국가교육회의	전국지역 아동센터협의회
서울	11.24.(화)	온라인토론	35	"	서울혁신교육지구 교사 네트워크
경기	11.27.(금)	로하스a플렉스 원탁토론 온라인토론 유튜브중계	95	국가교육회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포럼	국가교육회의
인천	11.25.(수)	원탁	49	국가교육회의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충청권	11.17.(화)	세종시교육원 원탁토론 유튜브중계	42	국가교육회의 세종시교육청	충청권교육청
영남권	11.18.(수)	온라인토론	28	국가교육회의	경남교육청
영남권	11.19.(목)	온라인토론	35	"	"
평생직업 영역	11.25.(수)	온라인토론	30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호남권	11.11.(수)	광주YMCA 원탁토론 유튜브중계	29	"	국가교육회의
유아·특수교사	11.25.(수)	온라인토론	58	"	국가교육회의

□ 국민참여단 1차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20. 11. 28.(토) 15:00 ~ 18:00, 온라인회의
- 내용: 지역별·주체별 숙의결과 종합하여 11.30.~12.3. 진행될 국민참여단 10대 의제선정 온라인투표에 부칠 의제안 정리
- 대상: 총 23명, 전문가 6명, 국민참여단 지역별 10명 및 주체별 7명 (학생·청년 2, 교원 유·초·중등·특수 각 1, 지역사회 1)

분야		전문가	분야		전문가
1	교육체제, 교육(학교)자치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4	마을공동체, 돌봄	양병찬 지역사회특위소위원장
2	교육과정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장	5	교원양성, 다문화, 유아·특수교육	이장원 지역사회특위소위원장
3	고등·직업 평생교육	남기곤 한밭대학교수 교수	6	교육 거버넌스	윤우현 지역사회특위소위원장

□ 국민참여단 2차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20. 12. 4.(금) 14:00 ~ 16:00, 온라인회의
- 내용: 국가교육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 발표할 국민참여단 투표로 선정된 10대 의제 종합,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회, 특위 공유·의견 수렴

- 대상: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 위원

□ 10대 의제 선정 온라인 투표

- 기간: '20. 11. 30. ~ 12. 3.
- 방법: 온라인투표 (제시된 21개 의제 중 3가지 선택)
- 대상: 국민참여단 전체 (6,710명 중 3,208명 투표)

분류	의제
교육 체제 · 교육 자치	개인별·지역별 교육 불평등 극복을 위한 포용적 교육체제 구축
	IT인프라·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수학습·데이터 기반 학교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체제 구축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교원 양성·재교육시스템 구축 및 인사제도 개선
	교육자치 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학교자치 확대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생 자치·참여 보장
유아 · 초등 · 중등 · 특수	민주시민·세계시민교육, 기후·환경·생태·문화예술·철학·인문학·역사교육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내용의 변화
	미래 교육환경 변화(코로나 19, 학령인구 변화, 에듀테크 등)에 따른 수업과 학습 공간혁신 및 지원체제 구축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유아교육법 정비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생태계 확장으로 학습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과정 운영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 지역·학교 자율성 강화, 마을교육과정, 학교 철학이 반영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변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방식의 다양화 및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책임교육 구현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인프라 확충 및 통합교육의 질적 발전을 통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는 특수교육 강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 마련과 상호이해교육 강화	
대학 · 직업	학생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대학서열화 해소를 통한 학벌중심사회 완화와 경쟁중심의 고교교육을 정상화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4차산업혁명·뉴노멀시대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전문대학·특성화고교의 직업교육 체제 개선
마공 · 돌봄 · 평생 · 거버 넌스	국가적 돌봄 지원체제 정비
	국민의 생애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주민자치, 일반자치, 교육자치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과 협치 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풀뿌리 마을교육공동체 토대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중간지원 조직 체계 구축

※ 음영 처리된 부분이 선정된 10대 의제

□ 국민참여단 전국 온라인 토론회

- 일시: '20. 12. 8.(화), 13:00~15:30, 16:00~18:30
- 대상: 의제별로 국민참여단 25인 내외 총 100인 내외* 참석
- 토론주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10대 의제에 대한 실행방안 등

- * 지역별 60명(서울 15, 경기 25, 인천 5, 충청 5, 영남 5, 호남 5)
- * 주체별 30명(학생·청년 6, 교원 6, 학부모 6, 마을공동체 6, 지역사회 6(아동 3, 평생 3))

분야		전문가	분야		전문가
1	고등·직업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3	학교혁신, 평생 (교육자치 학교자치 교육체제)	양병찬 공주대 교수
2	유·초·중등·특수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4	교육거버넌스 (돌봄, 마을공동체)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

□ 국민참여 미래교육 대토론회

- 일시: '20. 12. 9.(수), 15:00~18:00
- 장소·방법: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온라인토론
- 대상: 의제별 토론회 참석자 100인, 일반 국민참여단 유튜브 참여
- 내용: 국민참여단 선정 10대 의제에 대한 전체 숙의과정 공유, 의제별 숙의토론 결과 발표, 대국민보고대회에 10대 의제 토론결과 발표자 종합 토론

- 이하 생략 -

[참고 2] 국가교육회의 ‘국민과 함께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업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협의문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교육과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국민을 포함하는 대국민 설문과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설문문항 개발을 위해 국가교육회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2020년), 국민참여단 미래교육의제(2020년)를 바탕으로 교육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 100여 곳에 사전의견 수렴을 하였고(2021. 3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국민 설문은 교육의 가치 및 인간상 등 총론의 주요사항에 대한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2021.5.17.~6.17.) 약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설문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했고, 여기에서 도출된 쟁점에 대해서 사회적 협의(6.23.-8.21.)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쟁점이 되는 7개 주제를 선정하여 이후 온라인 토론-공개포럼(7.7.)-권역별 토론 및 청년·청소년 토론(7.17~25)를 거치며 토론하였다. 이어서 7개 주제를 다시 3개 주제로 좁혀서 100인 집중토론(8.7.)과 30인 종합정리(8.21)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사회적 협의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시작으로 온라인 토론방, 권역별 토론회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100인 집중토론단이 선정되었고, 100인 집중토론단에서 추천한 30명이 종합정리에 참여하였다. 종합정리에서 토론단은 전 단계의 토론결과를 종합한 협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쟁점에 대해 숙의한 후에 최종 협의문을 확정하였다. 종합정리에서 최종 확정된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하 생략 -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024년 12월 03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

토 론 ③

정 대 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국가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혁신 할 것인가?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